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08. 2.

발 의 자 : 이재술의원 외 11인

1. 제정이유

- 대구광역시가 시행하는 용역의 사전심의와 효율적인 용역수행을 위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역의 내실화와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용역은 시정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전문 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용역, 기술용역, 기타용역 등을 말함(안 제2조).
- 나. 시장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심의를 거쳐야 함(안 제3조).
- 다. 용역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함(안 제4조).
- 라. 용역심의 대상은 용역예정금액 3천만원 이상인 학술용역과 5천만원 이상인 기술용역 및 기타용역으로 함(안 제8조).
- 마. 심의회는 심의대상의 용역이 기존의 용역과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역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9조).
- 바. 시장은 용역에 관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함(안 제11조).
- 사. 시장은 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용역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여야 함(안 제12조).
- 아. 시장은 시가 발주한 모든 용역에 대하여 용역 완료 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13조).
- 자. 시장은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과 용역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를 하여야 함(안 제5조).

3. 기타사항

-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 나. 관계 법령 : 별첨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가 시행하는 용역의 사전심의와 효율적인 용역수행을 위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역이라 함은 효율적인 시정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 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시책·제도 등의 개발, 개선, 평가분석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조사, 연구 등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개발 및 이에 준하는 학술용역
2. 건설공사의 설계·감리를 제외한 계획, 조사, 자문, 시험, 검토 등 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기술용역
3. 제1호, 제2호 및 단순 노무성의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서 유상으로 위탁하는 기타용역

제3조(용역의 사전심의)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점검을 위해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제4조(용역심의위원회 설치) ① 용역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용역심의위원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실·국·본부장 등 8명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2명을 포함 하여 시정업무 주요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5조(심의회 회의) ① 심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전에 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회의를 개최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에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을 위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5명 이상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3. 용역의 계획, 용역기간, 용역비 등에 관한 사항
4. 용역의 유사 중복성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용역의 평가 등 용역업무의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제7조(간사 등)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정평가담당사무관이 된다.

제8조(용역심의 대상) 용역심의 대상은 제2조에 따른 용역 중 용역예정금액 3천만원 이상인 학술용역과 5천만원 이상인 기술용역 및 기타용역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심의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

1. 매년 상시 반복적인 용역의 경우
2. 전액 국고보조 용역의 경우
3.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위탁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4.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 또는 시급한 발주가 필요한 용역으로 심의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단, 이 경 우에는 심의회 사후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용역의 중복 검토) ① 심의회는 심의대상의 용역이 기존의 용역과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 역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당해 기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용역이 다른 기관이 현재 추진 중인 용역과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를 반드시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간 의 협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심의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 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 청할 수 있다.

제11조(예산편성 등)

① 용역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부서의 장은 용역의 심의여부를 확인하여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용역에 관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때에는 심의회 심의결과를 첨부하 여야 한다.

제12조(용역진행상황의 점검)

- ① 시장은 용역계약서에서 정한 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용역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여야 한다.
- ② 점검결과 용역수행자가 용역계약서상의 일정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진행상황이 과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용역의 평가)

- ① 시장은 시가 발주한 모든 용역에 대하여 용역완료 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정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또는 추진이 부진한 사업 등에 대하여는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평가에 따른 조치) 시장은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용역수행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용역수행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제15조(정보의 공개)

- ① 시장은 용역수행자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용역결과 및 평가결과서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6조(수당 등)

- 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대구광역시용역사업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 「대구광역시 용역업무처리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대구광역시용역사업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심의회로 본다.

〈관 계 법 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성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호혜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에 관한 국제협정 가입국의 국민 및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 및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과 차별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계약사무의 위임·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에 관한 절차, 위탁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정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기준, 지명절차 및 기준,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 (감독)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설계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 외에 당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주민참여감독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공사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거나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부당행위 등에 대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독업무수행에 따른 실비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⑤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감독범위·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